

병상 확보 보건복지부 중심 추진

靑 병상확보TF 마지막 회의… 전국 중환자 병동률 50%대로 떨어져

문재인 대통령 특별 지시로 마련된 청와대 코로나19 병상확보 태스크포스(TF)가 지난 7일 마지막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전국 병상 가동률이 50%대로 떨어지며 안정을 찾이길 따라 청와대는 관련 업무를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TF는 이날 오후 5시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TF 구성 이후 병상 확충 실적을 점검하고, 하루 1만명 확진자 발생 시에 대비한 병상 확충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또 국립대병원의 중증병상 확보 상황, 군의원의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 의료기관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토론했다.

앞서 TF는 지난달 20일 문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따라 병상확보의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구성됐다.

문 대통령은 참모회의에서 “청와대는 병상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병상 문제를 직접 책임져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다.

유 실장을 템으로 하는 TF는 지난 달 24일 1차 회의를 열고 연말연시 병상확보 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후 첫 회의만 해도 80%대를 기록했던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꾸준히 감소해 최근 50%대까지 떨어지며 안정세를 찾았으�다.

복지부 중앙시도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5시 기준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53%, 수도권 가동률은 55.3%를 기록했다.

지난 달 중순 최대 800명을 초과했던

의료기관은 317개, 외래진료센터는 37개까지 확보했다.

이율리 정부는 확보한 병상의 신속한 운영을 위해 지난 6일 기준 3979명의 의료 인력도 파견 중이다.

이와 함께 모듈형 응급병상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도시계획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내과·응급의학과 전공의 추가 모집 등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TF는 병상 가동률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병상 운영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이날 3차 회의를 끝으로 미무리하고 일일 병상확보 이행 상황 등을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생활치료센터도 2540병상을 확충해 당초 목표치인 2412병상 대비 105.6%를 확보했으며, 거점생활치료센터도 1044병상을 확충해 목표치 1084병상 대비 96.3%를 달성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확진자의 재택치료 배정 비중 역시 60%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재택치료 지원을 위한 관리

/뉴스

진형석 도의원, 민주 전북 4050위원회 공동위원장에



전북도의회 진 형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북 4050위원회 전북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 4050위원회’는 각 분야의 현장에서

주축 활동을 하는 40대~50대의 현안을 대변하고 조직 강화로 대선 승리를 위한 중앙당 상설 특별위원회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 4050위원회’는 노내 청년층과 노년층을 잇는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4050세대의 정책제언과 지역의 청년정지인 빌글을 통한 정권 재창출에 목표를 두고 있다.

진형석 의원은 “사회에서 활동 중인 중·장년층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세대 간 현안을 공유하고 전북의 현안을 발굴해 정책화하는 데 앞장서겠다”라며 “더불어민주당 정권 재창출의 든든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 지역과 현장의 중심에서 최선을 다해 이제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데 누구보다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선선택위 기구인 4050특별위원회 전북발대식이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유호상 기자



“대선 승리 다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왼쪽부터) 규현발전위원회 위원장,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윤호중 공동선대위원장, 박용진 청년미래정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본부 전단 회의에서 대선 승리 다짐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정책 도입할 것”

민주 이재명 대선후보

“부모가 같이 키워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7일 여성은 물론 남성도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동작구 맘스하트카페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주제로 진행한 베타버스, 국민반상회에서 ‘아버지 육아휴직률은 늘어나는데 실제적 뒷받침은 적다는 지적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육아휴직을 주로 여성이 이용하고 남성도 이용할 수 있는데 아빠는 거의 이용을 안 하고 있다. 눈치가 보여서”라며 “네릴란드 어린가는 강제로 한다고 한다. 아빠가 이용을 안 하면 엄마도 이용을 못 하게 패널티(불이익)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무적으로 비율을 맞추지 않으면 엄마도 이용하지 못하게 그런 방식을 동원하고 있다. 아빠가 이용 안 하면 부부가 다 순해 보게”라며 “그러니 사회적으로 아빠가 이용하는 게 당연하지(라는) 문화도 만들어진다. 우리 사회에서도 그건 도입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강제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일부 민간기업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저는 사실 정책으로 그걸 시행해볼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저녀를 출산하면 엄마만 키우는 게 아니고 원래 부모가 같이 키우는 것”이라며 ‘육아휴직도 엄마만 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다 같이 하는 것이고 공평하게 같이 육아 책임을 짓는 것이다. 사회에 사인을 주는 것이

안철수, 단일화 입장 고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지난 7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아린 단일화 관련 만남을 요청하면 응하겠느냐는 질문에 “만나지고 하면 만날수는 있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정치인이 만나자는 요청이 오면 누구라도 못 만날 이유는 없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일화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음을 못 밟았다.

안 후보는 이날 충청남도 천안 국립 밍향의동산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자신의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할 때이다. 그래서 저는 겸허하게 묵묵하게 제가 갈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뉴스



전주시의회는 임인년 새해를 맞아 지난 7일 시의회 5층 소회의실에서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각오로 의정활동에 힘차게迈进할 것을 다짐했다.

“자치분권시대, 시민과 함께”

전주시의회 신년인사회

전주시의회(의장 강동화)는 임인년 새해를 맞아 지난 7일 시의회 5층 소회의실에서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각오로 의정활동에 힘차게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동화 의장을 비롯한 34명 시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의원 윤리강령 낭독, 신년사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강동화 의장은 “그동안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간을 지나왔으나, 새해를 맞아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의 마음가짐으로 큰 발전과 성장의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다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 시군의장협, 군산시의회서 간담회

지방자치 발전방안 모색

강임준 군산시장에 감사패

김영일 부의장에 방문기념패

전북 시군의장협의회(회장 강동화)가 지난 7일 군산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시·군의회 의견경진회 간담회를 가졌다고 9일 밝혔다.

협의회는 지방자치 및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 협의, 의정활동 역량 제고를 위한 제반사항 논의 등 상생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의회 인사권 독립, 정체지원관 시행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는 등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영일 군산시의회 부의장은 “군산 시를 방문해 주신 시군의장께 감사드

린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침체는 물론 도민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면 반드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군이 지역을 뛰어넘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강동화 협의회장은 “올해는 30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전면시행으로 자치분권 2.0시대가 열려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면서 “앞으로 전북 시·군의회가 긴밀한 협력체계로 공조 대응하는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했다.

한편 전북 시군의장협의회는 강임준 군산시장에 감사패를 김영일 군산시의회 부의장에게 방문기념패를 전달했다. /김윤상 기자 · 군산=님현봉 기자

산업재해 안전관리전문기관 역할 확대

윤준병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를 적용하지 않거나 안전조치 준수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노동자에게 작업중지 조치를 할 것을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연안해야 하는 등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의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그동안 시행규칙에 머물러 있었던 노동자의 보호구 착용 의무 등을 법률규정으로 옮겼고 노동자가 보호구를 직접 구입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보호구 구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윤준병 의원은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차별 위주의 정책보다 예방 중심의 정책이 중요하고, 특히 사용자·노동자·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의무사항을 각기 강화하고 연계된 법적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산업재해를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모색하다가, 이미 현행법 제17조와 제21조 등 여러 곳에 규정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별로 높지 않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춰 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저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 내용을 보면,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사업주가 안전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노동자에게 보호구

/유호상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